



[산업] 용산시대 여는 LS 예스코 등 합류 지주 3社 결집 04

코스피	2459.82 (+1.28)	코스닥	850.29 (-12.65)
금리 (6개월)	2.29 (-0.03)	환율 (원/달러)	1077.60 (+3.80) (16일)

# 관세청 “해외직구품 되팔면 밀수”... 네티즌 발칵

### 중고거래 둔갑 되팔이족 급증 “계도기간 지나면 형사처벌” 직구족들, 靑 청원 등 시골



인천본부세관 특수물류센터에서 관세자들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때 국내 구매자들이 구입한 물품 통관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 해외직구시장의 규모는 2조원대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해외직구족의 ‘비과세 직구품 중고거래’에 직격탄을 때렸다. 중고거래로 둔갑한 ‘되팔이족’이 늘자, 당국은 지난달 ‘관세없는 직구품의 국내 거래 금지’를 계도하고 ‘관세법상 밀수입·관세포탈죄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냈다. 이에 “중고거래도 안 되냐”는 직구족들의 불만은 곧 ‘청와대 청원’에 이르렀다. 반면 업계 전문가는 ‘비과세 직구품 중고거래’는 관세포탈·밀수입죄 성립이 충분하다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해외직구품 중고거래, 밀수?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해외직구의 국내 시장규모는 2조 원대를 훌쩍 넘었다. 국내로

유입된 해외직구 상품의 물량이 늘어난 만큼, 해외직구품의 중고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판매처로 반품을 진행하면, 복잡한 절차와 더불어 최소 10일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세관은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한 번’이라도 되팔 때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지난달 16일 주요 대형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관세 당국의 계도작업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직구 구매가보다 높게 파는 게 문제지, 왜 애꿎은 직구족만 잡냐”고 탄식했다. 또 다른 시민은 “비과세 해외직구 물건을 쓰지 않을 거라면 누구한테 주거나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직구 물품 중고거래 ‘밀수’로 처벌 말아 줘나?’라는 게시글까지 올랐다. 청원인은 “최근 세관에서 해외 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 맞는 등의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 행위와 수입 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국 200불·기타 국가가 150불 이하로 관세를 면제받았더라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양육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되파는 것은 관세법 270조(관세포탈죄) 어느 항에도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직구품의 중고거래, ‘불법’ 이 같은 ‘해외직구 되팔이’ 논란에 조인관세사무소의 변병준 관세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과세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가소비에 대해서만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자가소비와 다른 상업적 거래형태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사용물품의 면세는 실제 수입되는 물품보다 간소화된 사항 즉 의약품 전자제품 등 일정

기관의 요건을 거쳐야 하는 품목도 예외적으로 자가소비라는 전제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아무런 승인도 거치지 않은 물품들이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풀리게 되면 이 건 공익적인 측면에서 더 문제되는 거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늘어나는 해외직구족들이 국내에서 되팔기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반품절차를 밟도록, 해외직구족들이 물건을 반품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했다. 변 관세사는 “과거에는 수출면장을 일일이 끊어서 반품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반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건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한미 맥스선더 훈련, 전투기 이륙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 북측 남북고위급회담 취소사태 파악 분주

### 北,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판문점 선언에 악영향 우려 靑, 관련부처와 신중히 논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북측이 전격 취소하면서 청와대가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관계 부처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스선더 훈련의 규모를 비롯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가 국회에서 강연과 저서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한 것 등이 원인일 수 있는지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청와대 측은 일절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남북 간 자리를 잡아가는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렇듯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향후 비핵화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 삼바 오늘 감리위 대심제 금감원, 스모킹 건 내놓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결정적 증거)

결전의 날이 왔다. 17일 대심제(對審制)로 열리는 임시 감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한 금융감독원이 여러 쟁점을 놓고 다툰다. 가장 큰 관심사는 금감원이 확보했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스모킹 건의 실체에 따라 이번 사안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삼성바이오 물론이고 아직 감리위원회에도 스모킹 건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성바이오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책임 있는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본다”며 “어떤 경우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중심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여부는 감리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6월 7일 증선위에는 삼성바이오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는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는 상

장 직전인 2015년 말에 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반영된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일단 스모킹 건이 무엇인 지 공개되어야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감리위에 앞서 전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수령한 ‘조치사건통지서’에는 회계처리 규정 위반의 구체적인 근거 및 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 것도 스모킹 건을 알려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i@